

# 에너지·과거사·정치개혁... 이 대통령, 제주서 복합 메시지

취임 300일, 제주서 타운홀 미팅  
제주, 재생에너지 전환 최적 지역  
국가범죄 4·3사건 재발 방지 강조

취임 300일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도를 찾아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2년부터 ‘탄소없는 섬 제주’를 비전으로 내세워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해온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제주도 타운홀미팅을 열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나. 사실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의 에너지 환경에 대해 “외부 의존은 쉽지 않고, 자연 재생에너지는 잠재력이 크고,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재생에너지가 특정 시간대에는 과잉 생산이 돼서 남아서 억지로 끄고 발전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열린 ‘제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상상을 해보면 (제주의) 모든 에너지원을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바꿔야지, 예를 들면 전기차로 바꾸고, 집 난방같은 것도 빨리 전기로 바꾸고”라며 “잘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속도를 내면 어떻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전환에 가장 빨리 현실적으로 성과 낼 수 있는 데가 제주도”라고 덧붙였다.

또 이 자리에서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제주도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전기차 전환 목표치를 2030년 50%, 2035년 100%로 발표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더 빨리 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는 환경 보호나 이런 것도 모범적이어야 하는데 아직도 배기가스를 뿜는 차들이 돌아다닌다”며

“주민들 입장에서 (제주도가) 넓지 않으니 충전 문제도 없을 테고 충전소 설치도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택시와 렌터카들의 전기차 전환 문제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결국 비용 문제인 것 같다. 재정 문제인데 정부 차원에서 하면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과감하게 빨리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비상상황인데 다시 검토해서 제주도랑 잘 상의하시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형사·민사처벌 시효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면서 “국가 권력이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나라, 그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우리가 이런 야만적 사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들이 있다”면서 진상규명, 배상 등을 방법으로 언

급했다.

특히 배상에 대해선 “자식이 된 죄가 있냐”고 그럴 수 있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누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면서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선 자손이 책임지게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더 잘하나, 누가 국민에게 더 희망을 주고 국가의 미래를 밝게 만들었냐에 따라 ‘어? 이재명 좀 하는데?’ ‘이 사람이 훨씬 더 잘해’ 그러면 또 바꾸고 (해야 한다)”며 정치에서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신념과 가치를 앞세우다) 그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에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 나프타 이어 합성수지까지... 당정, 수급 안정 총력전

전쟁 대응 위해 추경 신속처리 합의  
합성수지까지 수출 제한 확대 검토  
석유화학제품 매점매석 금지·단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아울러 석유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 합성수지에 대해서도 나프타(납사)와 유사하게 수출 제한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과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금융시장 환율 및 외환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역대급으로 가장 빠르게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켜겠다”면서 “4월 중에 현장에 긴급한 재정 지출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수급 문제도 점검했다. 안 의원은 “합성수지 부족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수급상황을 산업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전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며 “지금 나프타에 대해 수급 안정 조치를 하고 있지 않나. 이와 유사한 안정 조치를 검토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석유 추출물인 나프타의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나프타로 만드는 합성수지에 대한 수출 제한 가능성도 시사한 셈이다. 과자·라면 포장지와 음료 용기 등 식품 포장재 대부분은 합성수지로 만들고 있어, 최근 포장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합성수지에 대해 제품이 얼마나 공급되는지,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정확히 파악

하기로 했다”며 “플라스틱 소재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도 원재료를 5~6일 치 밖에 못 갖고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보건 의료 등 핵심 물품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동전쟁 장기화로 석유화학 관련 제품 가격이 치솟자, 당정은 석유화학제품의 매점매석을 제한하고 시장교란·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석유화학제품과 관련해 일부 유통교란 문제가 있어서 매점매석 금지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해서 석유화학 제품 공급망을 확대하게 된다면 보건 의료나 핵심산업 등 생활필수품 생산에 최우선 배정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안정화 문제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0조 3000억원에서 24조 3000억원으로 4조원

확대할 방침이다. 채권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국고채 바이백(조기상환) 등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도걸 의원은 “최근 채권 금리가 50bp(bp=0.01%)정도 올랐다”며 “지난 18일 5조원 국고채 긴급 바이백을 실시해서 5~12bp정도 떨어졌다가 그 이후 상황이 좀 어려워져 다시 상승 국면에 있지만 채권 금리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달 1일부터 편입되는 세계국채지수(WGBI)를 거론하며 “WGBI에 가입하면 그에 따른 자금이 4월부터 들어와서 채권 금리가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투자자금 유입이 금리 환율 안정으로 연결돼야 한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해외투자 국내 복귀 계좌 세제 지원 등 외환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정 간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국힘 버려야 보수 살아”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며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12년만의 재도전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래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 보수정당이 환골탈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5년 전 저는 한국 정치의 암덩어리, 지역주의라는 벽을 넘어 보겠다고 대구에 출마했다”며 “오늘 저는 지역주의보다 더 높은 벽을 넘고자 한다. 지역 소멸이라는 절망의 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는 저를 키워준 도시”라며 “대구 시민 곁으로 가겠다.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 그것이 저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구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이는 “대구 정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는 한 당이 독식하고 있다”며 “정치인이 일을 안 한다. 일 안 해도 서울에서 공천만 받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구시민을 표 찍어주는 기제로 취급한다”며 “힘들어하는 시민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 국힘, 초·재선 공부모임 ‘정책2830’ 출범

“선거·세대 두토끼 잡기 위한 모임”

국민의힘 소속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정책 연구모임인 ‘정책2830’이 30일 출범했다.

‘정책2830’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 및 기초강연을 진행함으로써 첫 모임을 가졌다.

모임의 회장을 맡은 박형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정책2830은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의미한다”며 “당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모임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경제·정치·외교안보 3개 분야로 나뉘어서 각자 열심히 토론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만들어서 당과 국가, 사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세대를 생각한다”며 “정책2830 모임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모임”이라

고 덧붙였다.

이후에는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가 ‘막 오른 AI(인공지능) 시대, 정책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형수 의원은 모임을 마친 뒤 ‘계파색이 없는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 상황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치인들이 모이면 얘기가 나올 수는 있다.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걸 위한 모임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